

통산부, 『여름철 전력수급 평가회의』 개최

최대수요 35,851MW로 작년대비 11.1% 증가

통신산업부는 지난 9월 24일 林昌烈 장관 주재로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전기공(주), 전기공사협회, 전력기술인협회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여름철 전력수급 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임 장관은 금년도 6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장기간 무더위가 계속되고 최대수요가 6차례나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전력 수급안정을 기한 것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 유관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모든 발전소가 고장없이 정상 가동되어 공급능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결과라고 치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통상산업부는 금년 여름철 전력수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 금년 여름철 7~8월에는 평년수준의 기온을 유지하였으나, 6월 중순과 9월초에 이상고온이 발생하는 불규칙한 기상여건속에서
  - 전력최대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6차례 경신하면서 지난 8월 20일 금년 최고치인 3585만 1천kW(전년최고치 3228만 2천kW 대비 11.1%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 공급예비율 7.3%(전년 6.2%)를 기록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였다고 밝히고
  - 금년도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은 최대수요로 당초 3600만 8천kW를 전망하였으나 이의 99.6% 수준인 3558만 1천kW가 발생함으로써 수급안정대책의 기초인 최대수요 예측이 정확

하였고

- 월성원자력 2호기 등 계획된 발전소 16개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7, 8월 중 대형 발전소의 고장정지를 방지하여 공급능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였고
    - ※ '96년에는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8월 중순경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가 동시에 정지하여 공급 능력 확보에 어려움을 주었음.
  - 7, 8월중의 하계휴가보수조정 요금할인제도와 자율절전 요금할인제도에 참여하는 수용가에 대한 요금혜택을 확대(10%)함으로써 최대수요를 당초목표 165만kW를 초과하여 약 184만 7천kW(최대 수요의 5.2% 수준)를 억제하였으며
  -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인식과 실천의지를 높인 것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다음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너지 소비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전기소비는 금년 1~8월에도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하는 등 여전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전기요금 조정 등 추가억제 대책마련
    - ※ 금년 1~6월 에너지소비증가율 3.6%
    - ※ 금년 1~6월 전기소비증가율 9.8%(1~8월 10.3%)
  - 전기수요관리(수요관리 요금제도, 고효율기기 보급 등)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요관리 요금제도에 참여하는 수용가에 대한 요금할인폭 확대, 한전의 수



- 요관리사업 강화 등 대책 마련
- ※ 하계휴가보수, 자율절전, 부하이전 요금할인제도 요금할인폭 확대
  - ※ 한전이 실시하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고효율 자동판매기 보급, 수요관리 요금제도,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 등을 확대
  - 금년중 에어컨이 당초 전망 118만대를 초과하여 138만대가 보급되었으며, 내년에도 150만대 이상이 보급됨으로써 여름철 최대수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냉방기기 직접제어,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적정여부 검토 등 대책 마련
  - ※ 냉방기기 직접제어란 통신망을 통해 수용가의 냉방기기를 순차적으로 on-off 제어하여 냉방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최대수요를 억제
  - ※ 냉방기기 구입시의 특별소비세(20%)와 사용할 때 전기요금부담(여름철 최대 수요가 전기기본 요금을 결정)이 냉방기기 사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에 비하여 적정한지를 재검토
  - 전기대체 냉방기기인 가스냉방기기와 빙축열 냉방 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해 지원제도 강화 및 홍보확대 등 대책 마련
  - 여름철 중 한전 선로고장과 아파트에서 자체관리하는 구내전력설비의 관리소홀로 정전사고가 빈발하여 무더위속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므로 배전 설비에 대한 투자확대, 아파트 구내설비 관리개선 등 대책 마련
  - ※ 한전이 관리하는 배전선로상의 정전사고는 금년 여름철 중 전년대비 42.7% 감소
- 이러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에는 금년보다 수급사정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관은 밝혔다.

## 변전설비용량 1억kVA 돌파

### 국내 최초 345kV 옥내GIS변전소 및 지중송전선로 준공

한국전력(社長 李宗勳)은 지난 10월 2일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소재 345kV 성동변전소 구내에서 李宗勳 한전사장, 韓俊皓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장과 유관기관 인사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전설비 용량 1억 kVA 달성을 국내 최초의 345kV 옥내 GIS변전소와 지중송전선로 준공에 대한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한 변전설비는 1961년 3사통합 당시 설비용량이 120만kVA였으나 36년만에 약 80배가 넘는 1억kVA를 돌파함으로써 변전전력사에 기념비적인 성과로 기록될 것이며, 옥내변전소는 지상 4층 지하 1층 (연건평 3,415평)으로 3년에 걸쳐 340억원의 공사비

를 투입하여 주변압기 500MVA 2대와 가스절연개폐장치 6회로를 건설하였다.

또한 1300억원이 소요된 성동-미금변전소간 지중송전선로는 착공후 8년 6개월만에 준공되어 OF(Oil Field)케이블 2회선 16.7km를 지중전력 구내에 시설하였다. 지중케이블은 전력구 방재트라후(절연터트)내에 설치되어 화재나 기타사고시에도 안전하게 시설하여 서울도심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용량의 전력수송 및 적정전압유지와 정전시간 감소 등 양질의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통신부, '9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신기술, 신산업분야의 벤처형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등 추진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 주재로 '97. 9. 25(일) 제39회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9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시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현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응한 구조조정의 단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 신기술·신산업분야의 벤처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98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벤처형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 연·기금,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 외국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 제한 철폐, 벤처기업의 해외주식발행 전면허용 등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투자재원을 확충함.
  - 기존 KOSDAQ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주식시장으로 전면개편하여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조달 여건을 개선함.
  - 지자체의 Techno-Park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구로공단 및 EXPO 과학공원에 벤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공급을 확대함.
  -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10개 부처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9개 정부투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계획」 제도를 시행함.

-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및 취득세·등록세 75% 감면을 통해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도모함.

##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 2000년대 산업여건에 적합하도록 98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함.
  - 제2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98~2002)에 착수 함.
    - 동기간중 10조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2만 5천개 업체를 지원
    -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중장기정책방향 설정 및 업종별·부문별 구조개선 추진방안이 포함된 「중소기업구조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함.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공제 사업기금 규모를 확대함.
    - 규모 : ('97) 3000억원 → ('98) 3500억원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 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확대함.
    - 정부출연 : ('97) 6000억원 → ('98) 7000억원

- 지역신용보증조합 : ('97) 6개 → ('98) 10개
-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하여 어음보험제도를 확충하고, 민간주도형 어음보험제도의 운용을 추진함.
- 민간의 어음보험 취급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180일) 등 중소기업의 수출입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을 확충함.
- 중소기업 박람회,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함.
- 무역협회 등 4개 기관의 중소기업 homepage의 통합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자상거래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함.
- 중소기업 제품 해외전시·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해외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진출방안을 모색함.

#### 중소기업 인력의 원활한 공급 추진

-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확대 추진함.
- 배정인원 : ('97) 45,650명 → ('98) 50,000명
-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97년 28% → 2000년 50% 수준)하고, 병역특례 지정업체의 벤처기업 창업시 소속전문연구요원의 전직
- 과정을 허용도록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개선함.
  - 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후 평가절차를 거쳐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함.
  - 재경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외국인력 관련 중요정책사항을 결정함.
  - 사후관리를 공익단체가 담당도록 하고, 관계부처 협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함.

## 통산부, 제1차 『國家에너지基本計劃』 확정 중장기적 에너지정책 방향, 비전, 추진전략 제시

통상산업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협의, 에너지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I.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배경

- 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를 보면,
- 국외적으로는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개방화 추

세가 확산되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가 에너지수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고,

- 국내적으로도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공급시설의 입지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수급이 어려워질 전망
- 따라서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에너지부문의 대응전

약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 에너지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공급시설의 확충,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 체계 구축 및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등에 대규모의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 전력, 도시가스 등 자연독점적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 석유, 가스, 전력, 석탄 등 에너지원이 다원화되고 있고, 소비구조도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에너지원간의 최적배분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환경, 산업, 주택, 교통, 등 관련부문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에너지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과 방향을 갖고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야 에너지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이러한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국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 에너지원간의 최적배분을 통한 합리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 석유, 가스, 전력 등 에너지원별 계획과,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등 기술개발, 에너지환경 등 부문별 계획 및 시·도의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며
  - 환경, 산업, 교통, 주택, 국토개발, 조세(가격) 등 에너지관련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음.

## II.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1.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구현

## 가. 에너지 수급구조 개선

- 에너지수요 증가 추세 안정화
    -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시책을 강화하여 2006년의 총에너지 수요를 전망치 대비 6% 감축 도모
    - 에너지 가격의 수급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관련 세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시스템 구축
  - 석유의존도 저감
    - 연료대체 및 효율제고로 2006년 석유수요를 전망치 대비 12% 저감하여 2006년 이후 석유의존도를 49% 이내로 안정화
  -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구현

#### –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구현

- 2006년 화석에너지 수요를 전망치 대비 9.3% 감축한 20억 5백만 TOE로 유지하고 CO<sub>2</sub> 배출량을 1인당 3.6 탄소톤으로 저감
  - 에너지비용절감 측면과 청정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정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며, 석유 탈황 및 주제유 부海内外 시설을 확충

#### 나.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 석유수급의 안정화
    - 정제산업 진입규제 완화, 석유제품 수출입 자유화 등 시장기능과 해외정제센터 건설 등을 통한 석유 공급 광역화 시스템 구축
    - 정제시설 및 중질유 분해시설을 증설하며, 장기 에너지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민자 중유 발전 및 지역 난방사업 검토·추진

### - 가스 공급설비 확충

- 천연가스 인수기지를 2002년까지 총 3개소로 확대하고, 그 이후 추가 건설물량의 효율적인 확보방안을 검토 · 추진하며, 천연가스 배관망을 1996년



- 년 1,309km에서 2006년 2,313km로 확대
- 천연가스의 경제적 도입을 위하여 시베리아 지역으로부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을 검토·추진
  - 전력 수요의 안정화
    -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입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민의 신뢰도 제고 및 발전소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지 입지형의 중소규모 LNG, 중유 열병합발전 확대
    - 민자발전의 비중을 확대하고, 통합자원계획을 전력 수급계획에 반영하여 발전소 건설소요 감축 및 가스 냉방 보급 등 첨두부하 전력수요 안정화방안강구
  - 다. 장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
    - 에너지 도입선의 다변화
      - 석유 중동의존도 감축을 위한 도입선다변화, 천연가스와 LPG의 지역별 도입 균형 유지 및 장기적으로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을 추진
      - 해외자원개발 확대
        - 해외자원개발 도입목표를 2010년까지 석유수요의 10%, 2006년까지 유연탄수요의 30%로 설정·추진하고, 해외 가스전개발을 활성화
    - 라. 지역 단위의 형평성있는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농어촌 가스화
        -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확보 및 체적판매 방식 확대
        -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사업 육성
          - 지역단위의 특성에 맞게 폐열 등 미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프로그램을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 2.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 가. 에너지 산업의 경쟁여건 조성
- 석유산업
    - 1997년부터 석유 수출입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1999년부터 석유정책업에 대한 신규진입과 외국인 투자규제를 폐지하여 국내석유시장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경쟁을 촉진하며, 민간자율적으로 석유산업의 과잉투자를 억제해 나가도록 유도
  - 가스산업
    - 천연가스 도매부문의 경영혁신을 도모하면서, 인수 기지 등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민간참여 및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 소매부문의 경영평가제 도입 및 대수요처에 대한 도·소매간 경쟁공급방안 도입 검토
  - 전력산업
    - 발전시장을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조성하여 민자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의 민자도입 검토
    - 전력산업의 공익성 확보 및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
  - 나. 에너지 가격 자유화 및 가격체계 개선
    - 석유 가격
      - 1997년부터 석유제품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고, 석유관련 체제를 개편하여 유종간의 가격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 가스 가격
      - LNG공급자와 대수요처간 계약가격제를 유도하고, 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구조 개선
      - LPG가격은 연동제를 거쳐 자유화 검토·추진
    - 전력 요금
      - 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구조 개선, 적정수준의 투자보수율 보장 및 정기적으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조정
      - 민자발전사업자의 구입전력에 대한 가격조건을 개선
    - 다. 안전 등 에너지관련 서비스 강화
      -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여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가스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되, 안전

- 진단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후관리를 강화
- 품질 등 에너지 서비스 향상
    - 에너지 품질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 판매 단계의 정보화 촉진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지원
- 라. 에너지 유통부문 효율화
- 석유 유통부문
    - 1997년부터 석유판매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석유유통업체에 POS시스템 도입 촉진 및 경영다각화 도모
  - LPG 유통부문 및 도시가스사업의 효율성 제고
    - LPG 유통마진을 자유화하고, 체적판매 및 계획배달을 확대하며, 자율에 의한 배송센터 및 통합 안전관리센터 도입 유도
  - 도시가스사업의 효율성 제고
    - 요금, 안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시가스회사의 경영평가 실시를 검토하여, 도시가스 공급권역의 광역화 검토 · 추진
- 3.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 가.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시책의 추진 기반 강화
- 에너지절약 프로그램개발 및 민간부문의 절약기능 강화
    - 최종소비 실태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시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 · 시행하고, 민간부문의 절약기능을 활성화
    - 절약정책의 추진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자, 에너지공급자, 절약전문기업 등으로 확대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진단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에너지진단사업에 경쟁을 도입
  - 수요관리형 가격구조 개선
    - 에너지가격 예시제 등을 실시하여 수요관리 기능을 강화
    - 이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에너지관련 세제도 개편
- 통합자원계획(IPR) 활성화
-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급사가 장기수급계획에 따라 적정수준의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도록 통합자원 계획(IPR) 실시를 활성화
-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및 대상의 확대
- 효율이 낮은 에너지기기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등 효율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
  - 소형차량 보급확대 및 기준연비관리제도 도입여건 조성
- 나.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역에너지개발사업 활성화
- 중소규모의 열병합 및 지역난방의 확대
    -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 중소규모 지역난방 보급을 촉진하며, 냉난방 수요가 큰 대형건물의 열병합발전을 확대
  -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기반 조성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지역에너지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

## 4. 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 가.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체계 구축

- 체계적인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 추진
  - 에너지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에너지소비를 10% 수준까지 절약할 수 있도록 절약기술을 향상시키고, 에너지수요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 추진
  - 에너지 절약, 대체 및 청정에너지 등 분야별 절약 잠재량, 과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Top-Down방식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
  - 실용화사업의 촉진
    - 신 ·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기술 시범적용

사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 실용화사업을 확대

- 신·재생에너지 수요창출 및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태양열·태양광 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을 확대

#### 나. 기술개발 지원체제 강화

- 에너지기술관련 국제협력사업 강화
-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프로그램의 참여 확대, 에너지실무위원회를 통한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 증진, APEC에서의 공동기술개발 및 정보수집, 에너지기술 관련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기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인력, 시설의 확충
- 에너지 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 가공 및 제공기능을 강화
- 대학의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연구인력 기반 확충

### 5.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 가. 에너지정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 시장기능의 제고를 통한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
- 국제환경규제의 추이에 따라 에너지의 오염물질에 비례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여 에너지 공급자의 환경투자를 유도
- 정부와 산업계간의 자발적 협정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방안을 강구
- 에너지 환경기술 개발·보급 및 이용효율 향상
- 소비단계의 절약기술, 연료전지 등 차세대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 방지 기술 등을 집중 개발·보급하고, 중질유 분해 및 탈황설비 확충, 발전소 공해방지기술 개발 및 설비 확충
- 에너지비용절감 측면과 청정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로 전환되도록 청정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을 제고

#### 나. 에너지환경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능력 제고

- 에너지환경관련 국제협력 증진
  -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서 후속협상, IPCC 등 지역환경영향평가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 OECD 가입에 따른 국제 환경규제 강화 추이에 효과적인 대응방안 강구
- 기후변화협약 대책의 통합적 추진
  -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 실행계획 수립과 기후변화협약 범부처 대책위원회(가칭)의 설치를 검토·추진

### 6. 에너지관련 국제협력 강화

#### 가. 양자간 자원협력의 전략적 추진

-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강화
  -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동軸(석유), 아시아·태평양軸(천연가스, 유연탄), 동북아軸(천연가스, 석유)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협력을 추진
  - 자원 보유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를 확대하고, 국가별, 지역별전문가를 양성
- 에너지관련 환경 및 기술부문의 협력 증진
  - 선진국과는 에너지실무위원회 등을 통하여 에너지 기술 및 환경관련 협력을 강화
  - 선진국과는 에너지기술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 나. 다자간 협력의 역량강화

- 국제에너지기구 가입 및 국제기구의 협력사업 참여 확대
  - IEA 가입을 추진하여 선진국과의 정책 및 기술협력 증진과 비상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APEC에서의 에너지협력을 도모
  - UNDP/ESCAP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및 자

## 원확보 기반을 조성

- IPCC, COP활동에 참여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
-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제 구축
  - 동북아 국가와의 보완적 협력을 도모하고, 천연가스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을 검토·추진
  - 남북한의 통일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 7. 남북 에너지 통합기반 조성

- 가. 남·북한간 상호보완적인 에너지협력 방향 정립
- 에너지부문의 효율적인 협력체제 모색
    - 본격적인 남북간 경제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에너지 협력 방향을 정립하고, 에너지 부문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남북한간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효율적인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동북아 에너지시장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 북한과의 통일 및 경제교류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남북 통합 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추진
  - 에너지원별 협력방향
    - 석유는 정제설비의 확충과 유통망 구축 검토
    - 가스는 LPG 공급방안과 동북아 천연가스 개발 협력방안 모색
    - 전력은 전원시설 연계 확충과 상호 융통방안 검토
    - 석탄은 잉여무연탄 지원 및 폐탄광 시설 활용방안 검토

## 8. 에너지 위기관리능력 강화

- 가. 위기 사전 대응능력 확충
- 에너지 비축능력 확충
    - 1998년까지 2차 석유비축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6개 기지(4900만배럴)를 건설하여 총 9100만배럴로 비축능력을 확대하고, 2002년까지 6200만배럴 규모의 3차 비축기지건설계획을 추진
    - 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을 확대하여 2005년에 60

일분 비축물량을 확보하며, 민간부문 의무비축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 천연가스의 저장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비축 물량 기준을 최대수요일 또는 동절기수요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 에너지·자원의 도입 신축성 제고 및 국제공조체제 강화
  -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자리적 으로 인접한 석유 수출국으로부터의 장기 도입방안을 추진
  - 천연가스 도입선도 다변화하는 한편, 신규 LNG도입선을 프로젝트와 연계확보
  - 평상시에 대산유국 자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시에 대비한 국제공조체제를 확립하며,
  - 비상시 대책으로 IEA회원국과 공동 모의훈련, 대응체계 정기점검 등 비상대응체계 강화

### 나. 에너지위기 발생시 대응방안

- 석유위기시 대응방안
  - 1단계로 석유류 수급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며, 범국민적 절약운동 등 국민부담이 적고 실천 가능한 시책 시행
  - 2단계로 상황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비축유 중 일정물량 방출, 부문별 에너지 이용 제한조치 및 석유의 용도별 할당, 배급 등을 시행하며, 유조선 항로인접국가에 입항 지원 협조요청, 제3국 비축유의 확보 방안 강구, 국제기구 등 다자간 채널을 통한 비축부족량 충당 도모
- 가스위기시 대응방안
  - 1단계로 발전용 천연가스 물량 감축으로 민수부문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장기계약상 도입계획을 활용하여 공급능력을 제고
  - 2단계로 대량수요자의 연료전환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전용 및 지역정압기 조작에 의한 시간대별 제한공급을 실시

## 世界의 에너지 需要

### 2020년에는 2배로 (英, 파워젠社 調査)

유럽과 인도, 아시아태평양에서 발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英國 파워젠社가 마련한 「에너지 2020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 의하면, 세계의 에너지수요는 2020년까지에는 2배, 발전량의 수요는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 리포트는 이러한 수요증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① 발전량 확대를 위하여 3조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② 민영화와 자유화의 경향이 촉진되고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정부와 산업체가 직면하는 문제는 산업, 경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 소비의 증대와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등 환경에의 영향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취할 것인가이다.

④ 성공하는 기업의 두 가지 전략모델, 즉 대규모의 종합세계에너지기업과 소규모의 유연한 전문기업의 출현이다.

## 中國版 新幹線

### 受注競争, 최종단계에

中國交通運輸協會(郭洪濤회장)는 지

난 10월 16일 北京의 국제클럽에서 「제3회 중국국제운수·물류박람회」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육·해·공 수송인프라의 가속화를 위하여 해외기업의 참가를 요망하였다. 특히 中國版新幹線(北京-上海간 고속철도)은 최종단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독일, 불란서 등의 구주세에 일본기업연합이 가세하는 가운데 수주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제3회 중국국제운수·물류박람회는 '98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北京의 중국국제전람센터에서 개최된다. 동박람회는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하여 鐵道省, 交通省, 對外貿易經濟協力省, 國內貿易省, 民航總局, 航空工業總公司, 船舶工業總公司, 石油天然ガス파이프 등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 외국의 기술, 자금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항만, 공항, 도로 등의 인프라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北京-上海의 고속철도이다. 독일, 불란서 공히 국위를 걸고라도 획득할 태세이며 어디로 낙찰될 것인지 숨막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월에 중국을 방문한 일본의 橋本龍太郎 수상, 그리고 재삼 訪中한 豊田章一郎 경제단연합회장도 일본의 新幹線技術의 채용을 어필하여 왔다.

한편, 구주철도연합과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의 中國國際工程諮詢公司(王武龍總經理)의 공동그룹의 타당성 조사(FS) 보고가 곧 마련될 상황이다.

세계최대의 댐인 三峽댐의 발전소입찰에서 일본연합은 패퇴한 바 있으나 중국판新幹線의 낙찰귀추는 '98년 봄의 박람회에서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日, 風力發電 전문회사 설립

### 내년 봄까지 8개 발전소 건립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요즘들어 부쩍 각광을 받고 있는 風力發電 사업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개하려는 일본 최초의 전문회사(회사명 : 에코파워)가 최근 설립됐다.

내년 봄까지 일본 전국의 여덟 군데에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전기를 일으키는 풍차를 여러 대 도입한 대규모 발전시설 '원도팜'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또 종합상사인 니치멘도 풍력발전 사업에 참가할 뜻을 비추고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람(風)비즈니스'가 영역을 크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코파워社에는 에하라製作所나 東京火災海上保險·스미토모銀行·오릭스 등 16개 업체가 출자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는데 자본금은 일본의 벤처기업으로는 규모가 큰 17억 4천만엔이 될 예정이다.

이 회사의 계획에 따르면 금년 내로 훗카이도·아오모리·나가사키 등 1개 道·4개 縣의 여덟군데에 소규모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모두 15기의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發電용량을 합치면 6,000kW가 될 전망이다.

또 '98년엔 39기(1만 5600kW), '99년엔 107기(5만 3500kW)를 설치하고 일부는 '원도팜'으로 조성해 본격적인 電力 판매사업을 별일 예정으로 되어 있다. ■